
보건복지부 업무보고

2026. 07. 16.

목 차

I. 상반기 주요 성과	1
II. 핵심 추진과제	3
1. 역점 과제	4
2. 개혁 과제	9
3. 지방주도 성장 과제	10
4. 국가정상화 과제	11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1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(77-1·2, 86-2·3, 90-1·2·4)

- **(생계)** 80여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*, 생계 급여 최대 금액 지급** 및 청년 근로·사업 소득 공제 연령·금액 확대***
* 4인가구 기준, 6.51% 인상(전년 대비) ** 4인가구 기준, 월 최대 207.8만원 지급
*** ▲(연령) 29세 이하 → 34세 이하, ▲(공제금액) 40만원+30%→ 60만원+30%
- **(위기)** 먹거리 안전망^{그늘드림} 300개소 운영^(7.1.기준), 자살시도자유족 치료비 지원 소득 조건 폐지 및 자살예방·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강화*,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^(26.2.)
* 약 16만명 이용, 위기가구 2,922가구 발굴·지원, 민간후원 116억원 확보('25.12.~'26.6.)
** 금융취업돌봄 등 19개 분야별 취약계층과 자살예방센터 간 대상자 연계의뢰 매뉴얼 시행('26.4.)
***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7.8만명 조사, 3.5만명 지원('26.6.30.기준)
- **(의료비)** 26년만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*, 희귀·중증난치 산정특례 확대^(+70개 질환) 및 재등록 절차 완화, 과잉 우려 비급여 가격 관리** 착수^(26.2.~)
*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(5천명 추가 보장)
** (예 : 도수치료) 43,850원으로 가격 설정 및 본인부담률 95% 적용(年 15회 이내)(26.7.1.~)
- **(노후)**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* 및 군 복무·출산 시 가입기간** 확대,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개선^(26.6.)(약 10만명 감액 중단)
* ('25) 납부재개자 → ('26) 월 소득 80만원 미만(납부 재개여부 무관), 110,779명 지원('26.1.~5.)
** 출산둘째→첫째부터 12개월(셋째부터는 18개월씩 상한없이 인정), 군 복무6개월→12개월

2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 기반 구축(83-1·2, 84-1·2·3·4)

- **(인력)** 과학적 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 정원^(27~31, 총 3,342명) 증원^(26.2.), 안정적 지역·필수·공공의사인력 확보 위한 지역의사제^(26.2.), 국립의학전문대학원^(26.5.) 근거 마련
- **(인프라)** 진료·교육·연구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국립대병원 이관^(26.2., 교육·복지부), 안정적 대규모 지역·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근거 마련^(26.3.)
- **(안전망·환자권리)**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민형사 부담 완화 근거 마련^(26.5.), 서비스 결정권·의견 제안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 확립^(26.4.)
- **(응급)**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 체계* 구축, 최종치료 역량 고려 응급실 지정기준 개편^(26.6.), 야간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**
* 광주전라 시범사업(26.3.~5.) : 중증환자 사망자 수(일평균 : 2월 9.1 → 5월 7.1명) 및 현장체류시간 감소
** ▲(달빛어린이병원) '25년 115 → '26년 153개소, ▲(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) '25년 12 → '26년 14개소
- **(의료제품 수급^{긴급현안})** 민·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일일 모니터링 실시, 원료 최우선 공급·유통 지원*·기업 부담 완화^(수가 조정)로 빠른 수급 안정세 회복**
* ▲(주사기 핫라인⁴¹⁶) 457개 의료기관 62만개 공급, ▲(희귀질환자⁵⁴) 11개 질환 58종 구매 지원
**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현황(전년대비 비율) : (1차, 4.14.~20.) 84~116% → (6차, 6.22.~26.) 98~117%

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(78-2·3, 79-1·2, 87-1·4, 91-1)

- **(통합돌봄)** **초·시군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**^(‘26.3.27.~) 하루 평균 745명^{총 4.6만명} 서비스 신청 및 1인당 평균 3.3건 서비스 연계^(‘26.6.기준)
 - 재택의료센터* 전국 설치^(‘26.2.), 퇴원환자 지원 등 국민체감 **新서비스 도입****
 - * 의사·간호사·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이 방문 진료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
 - **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전국 시행^(‘26.3.), 임시거주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집^(122호) 도입^(‘26.3.),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실시^(‘26.4.),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^(‘26.5.)
- **(아동)**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^(‘26.4.), 최대 24시까지 야간돌봄** 제공^(‘26.1.), 온라인 신청 등 입양절차 개선
 - * ▲(연령) 8세→13세 미만(年1세씩 상향), ▲(금액) 수도권10/비수도권10.5/인구감소11·12만원
 - ** 마을돌봄기관(지역아동센터·다함께돌봄센터) 343개소에서 최대 24시까지 돌봄제공(기준 : 20시)
- **(장애인)** 발달장애인 대상 최종증 통합돌봄* 및 주간·방과후활동 서비스 확대**,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^(‘26.2.), 「장애인권리보장법」 제정^(‘26.5.)
 - * ▲(전문수당) ‘25년월 5만원 → ‘26년월 20만원(4배↑), ▲(단가) ‘25년24,930→ ‘26년31,086원(1.25배↑)
 - ** ▲(주간) ‘25년1.48 → ‘26년1.65만명, ▲(방과후) ‘25년1.1→ ‘26년1.2만명

< 주요 우수사례 >

❖ ‘나홀로 집’에는 이제 그만, 야간 돌봄공백 해소

- ▶ 야간돌봄 수요조사(‘25.7., 2.5만명 참여) 기반 국민이 원하는 제도* 설계
 - *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, 20시 이후 언제든지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제공 필요
- ▶ 국비(약 20억) + 민간후원 60억원 확보(KB금융, ‘26~‘28) → ‘26.1월부터 서비스 제공

4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육성(32-3)

- **(수출)** ‘26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수출액* 역대 최대 실적^{160억\$} 달성
 - * 의약품 60.6억\$(전년대비14.2%↑) + 의료기기 30.7억\$(전년대비5.8%↑) + 화장품 70.0억\$(전년대비27.2%↑)
- **(규제)**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기간 단축(최대 490→80일)^(‘26.1.), 첨단 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제출자료 완화 및 치료 1호 승인^(기획형 규제샌드박스*)
 - * (現) 임상연구 완료시 치료 신청 가능 → (改) 국내외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로 치료 신청 허용
- **(육성)** **제약** 임상3상 특화펀드^{1.5천억원} 조성 착수^(‘26.5.), **의료기기** 세계최초·최고 난이도 도전적 R&D 대규모 투자 개시, **의료AI** 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착수^(‘26.4.)
 - *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(복지부-과기부-산업부-식약처 합동, ‘26~‘32, 총 9,408억원)

< 주요 우수사례 >

❖ 희귀 혈액암 재발 방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

- ▶ 치료 기회가 없는 희귀·난치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*를 통해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^(‘26.5.)
 - * 정부가 과제를 선제적 제안, 사업자 모집을 통해 기업이 신청하면 특례를 허용하는 top-down 방식
- ** (現) 임상연구 완료시에만 치료 신청 가능 → (改) 국내외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로 치료 신청 허용

Ⅱ. 핵심 추진과제

비전

생명존중 복지국가,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

역점과제

①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

- 복지안전매트
- 자살예방
- 응급·분만
- 건강생활안전망

② 국가책임 돌봄체계 확립

- 통합돌봄
- 장애인 돌봄

③ 바이오·AI기반 성장동력 육성

- 바이오헬스
- 보건의료 AX
- AI기반 복지·돌봄

개혁과제

④ 연금구조개혁

- 기초연금
- 국민연금

⑤ 청년복지정책 도약

- 소득보장
- 자립지원
- 위기아동·청년

지방주도성장 과제

⑥ 5극·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

- 공공의료체계
- 지역·필수의료 기반

국가정상화 과제

⑦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

- 가짜진료 및
가짜환자 근절
- 산후조리원
예약금
미반환 방지
- 가짜 앰블럼스
근절
- 의약품 접근성
제고
- 검체검사
위탁수탁
보상체계 개편

1 역점 과제

①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(77-1-2-3, 86-1)

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

※ 신청해야 하는 수동적 복지 ➡ 빈틈없이 포착·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

- (위기포착) 금융위기가구 중점발굴^(26.8.), 위기정보* 신규 연계^(26.9.),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^(26.12.) 등 금융위기 신속 포착·지원
 - * 채무조정 중지자,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, 불법사금융 피해자
- 위기가구 위기정보 입수 주기 단축(격월→매월), 생활 위기정보* 추가^(26.9.)로 정확도 향상
 - * 단전·단수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·수도 사용량 급감 정보 등 생활 정보
- 고독사 특화 위기정보* 활용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(10만명)^(26.下),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영역 확대 및 청년·중장년·노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
 - * 체납, 자살, 알코올질환, 정신질환, 생활패턴 감지정보(전력 사용량 이상징후) 등
- (선제지원) 현장에서 바로 읍면동 현장의 재량으로 위기에 곧바로 대응토록 긴급복지제도 확대·개편^(27.), 위기가구 방문 시 희망드림 꾸러미 신설^(27.)
 - * ①(빠르게) 소액 긴급생계 우선지원, ②(촘촘히) 사례관리 연계 강화
 - **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 세트 지원, 원활한 상담 여건 및 우호적 관계 형성
- 신청없이 지원 보편급여 자동지급* 시행^(27.), 선별급여는 既보유 정보 활용으로 별도 신청 없이 조사·지급^(26.下~), 직권신청*** 법적기반 마련^(27.上)
 - * 연령·출생신고 정보로 자격확인 가능한 아동수당·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 자동지급
 - **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자 신청간주 시행^{26.7}, 시행령 개정完, 장애인연금 등 법개정 사항 신속 추진^(26.下~)
 - ***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가능하도록 적극행정 既 시행^(26.4.) → 법적 근거 보완 추진
- 그냥드림 전국 229개 시군구 사업장(300+α개) 설치 완료^(26.9.), 경찰청·민간협력 등 통해 그냥드림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·지원 강화
 - * 현장점검 및 시군구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운영체계 확립 및 안정적 정착 지원
- (소득안정) 기준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'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^(26.7.),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^(27.~), 의료급여 건강 성과 중심 의료급여 혁신^(27.~)
 - * (생계)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^(27.~), 노인 연령대별 순차 폐지 검토^(28.~)
 - (의료) 중증장애인 중증허위질환 및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돌봄 필요 높은 대상부터 개선 검토^(27.~)
 - ** 예방부터 재활·회복, 지역사회 안착까지 적극 보장하여 중증화 및 사회적 입원 방지

② 자살률 하락* 추세 공고화

* 월간 자살자 수('26.1.~4.) : 전년동기간대비 평균 12.9%↓

※ **자살률 OECD 1위 오명 극복 : '24년 29.1명 → '29년 19.4명 → '34년 17.0명 이하**

- (복합위기)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기관^(現19개)·시스템^(現3개) 연계 확대^(26.下~)
- (긴급대응) 자살시도·사망사건 관련 복지부-경찰-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 강화^(27.),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 확충
- (109 상담전화) 신속응대팀* 운영^(26.7.)·인력 2배** 확충^(26.10.)·업무지원 AI 도입^(26.11.)
* 대기 중인 내담자가 위급한 상황인지 확인 ** 103명 → 200명

③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·분만의료체계 구축

※ **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한 이송·치료 제공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**

- (이송) 시도별 이송지침 마련 및 광역상황실 통한 전국 이송-전원 연계^(26.9.)
* 6개(서울·인천, 경기·강원, 대전·충청, 광주·전라 대구·경북, 부·울·경) 권역 단위 이송지침 정비
- (응급실)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기능 강화 목표 권역-지역응급센터 지정기준 개편^(26.6.), 권역센터 확대(44→60여개소)^(26.11.)·관리 강화**
* ▲(現) 인력·시설·장비 중심 → (改) 주요 중증질환(23개 질환군)의 진료역량 고려
** 권역응급의료센터 최종치료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 보상방안 등과 연계^(27.)
- (고위험 임산부·신생아) 지역별 협력체계* 연내 전국 확대, 전원 신속화**, 모자 의료센터 보상 강화^(26.下~), 5급 중심 중증센터 단계적 확대(2→6개소)^(27.~)
*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12개 협력체계 운영중^(25.4.~), 충청·전북·제주 확대 예정
** ▲상황요원 증원(5→15명), ▲모자의료정보시스템 개통, ▲전원의뢰방식 개선(1곳씩→여러 곳 동시)

④ 애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

※ **건강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완화 및 빈곤 전략 예방**

- (요양병원 간병) 의료·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^(27.)하되, 의료역량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확대
* ('27) 1.5만명 → ('28~'29) 3.4만명 → ('30) 8.5만명
- 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) 비수도권·공공병원부터 '병원 단위'로 전환* 추진^(26.12.~)
* (現) '병동 단위' 간호·간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·질환 선별 문제 발생
- (상병수당)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알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지원 제도화^(27.)
- (희귀·난치) 입원·외래 본인부담(현행 10%) 단계적 인하 추진^(26.下), 희귀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 대폭 단축(240→100일)^(26.7.)
- (의약품) 14년만 제네릭 약가 15.7% 인하 및 과다품목 난립 관리 강화^(26.8.)

② 국가책임 돌봄체계 확립(78-2·3, 79-1·3)

① 모두의 통합돌봄 안착

※ 모두의 통합돌봄으로 ①가족 돌봄부담 경감 + ②사회적 입원·입소 방지를 통한 재정 절감

- (대상) 노인 外 장애인은 지역(現 201개 시군구) 확대, 정신질환자는 시범사업('27.~) 후 본사업 전환 추진
- (서비스) 재가의료·건강관리·장기요양·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60종*까지 확대 →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생애 쏙주기 지원(~'30.)
 - * ①방문재활·영양 등 신규서비스 확충 + ②국가서비스 틈새 보완 위한 지역특화서비스 확대
 - (의료)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점 재택 의료센터* 도입('26.下 시범), 의료·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('26.6.463 → '30.650개소)
 - * 기존 방문진료 외 특화서비스(방문재활 등) 제공, 지역사회 교육 및 네트워크 연계·조정 등
 - (요양) 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입('26.下 시범), 중증(1·2등급) 재가급여 한도액 확대*, 의료적 욕구 반영을 강화한 등급판정체계 개편**(~'28.)
 - * ('26)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(1등급 279만원) 대비 90% 수준 → ('27) 100% 수준
 - ** (現) 신체기능 중심 판정 → (改) 인지기능까지 포괄, 간호 등 의료적 욕구 반영 강화
 - 존엄한 임종어르신이 살던 곳(자택·요양시설)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마련* 및 요양시설 임종기 지원** 추진
 - *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중심 재가 임종 지원 등 모형 마련('26.下) 및 시범사업 실시('27.)
 - **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중심으로 계약의사 역할 강화 등 추진('28.~)
 - (돌봄) 맞춤형 영양·가사·외출동행 등 중점돌봄 필요 독거노인 돌봄 강화,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 확대('26년 10→'30년 226개 시군구)
- (인프라) 지방의료원·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참여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등 취약지 공공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
- (성과관리)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* 운영('27.), 성과기반 예산 자원체계 구축**('26.下~)
 - * ①전담인력 확충률, ②우선발굴필요군 대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률, ③서비스 제공률
 - ** '26년 운영성과를 '27년에 평가, '2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 시 평가 결과 반영
- (기본계획) 실태조사*(~'26.7.)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 마련('26.11.) →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사는 곳에서 편리하게 누리는 통합돌봄 안착(~'30.)
 - * 시군구별 대상자 규모 및 서비스 공급현황 분석, 필요 수요 대비 공급 격차 계량화

②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

※ **돌봄·소득·건강·자립·일상생활** 숙원 과제 해결로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

- **(돌봄)** 발달장애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 대응 최종증 24시간 긴급돌봄 확대^(27.~)(現 대구·경북 2개소), 활동지원 65세 이상 既수급자 선택권 보장^(27.7.)
 - * (現) 65세 도래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급여 감소분 만큼 활동지원 보전 →
 - (改) 장기요양 서비스 外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
- **(소득)**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 확대^(27.), 공공일자리 지속 확충^(26년 3.58만명)
 - * (現) 기존 1·2급, 3급 중복장애 → (改) 기존 + 3급 단일장애
- **(건강)**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^(26.下),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^(26.下) 등 건강보건관리 체계 구축
 - * ▲(장애친화 산부인과) 10 → 15개소, ▲(어린이 재활의료기관) 39 → 39+α개소
- **(자립)** 자립 희망 시설입소 장애인·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 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서비스 제공*
 - * ('26.4.) 시범사업을 통해 559명 지원 중 → ('27.3.) 본사업 시행
- **(일상)** 책장장애 신설^(26.7.), 외국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온라인 무료 국제인증 시행^(26.9.),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카드신설^(26.12.)

③ 바이오·AI기반 성장동력 육성(32-2·3, 91-4)

①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

※ **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,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명 달성, K-뷰티 수출 200억불 돌파(27.~30.)**

- **(제약·바이오)** 메가펀드(1조원) 조성·투자^(27.), 「스타트업 육성 전략」 수립^(26.9.), 초격차 확보를 위한 ‘국가대표기술 30선’ 선정·집중지원^(26.下~)
 - * (예) 바이오 인공조직·장기, AI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등
- 혈액암 등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 국내 전환 추진(정부주도 임상연구)
- **(K-의료)** K-헬스케어 통합허브* 구축,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^(27.), 한-UAE 바이오·의료AI협력 MOU** 체결^(26.下)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
 - * 한국 방문 전 사전상담-국내진료-사후관리까지 쉼주기 관리 제공
 - ** 바이오·의료 AI 분야(10개 과제) 시범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
- **(K-뷰티)** 세계 최대 시장(美) 집중 공약을 위한 물류 지원^(26.),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현지 판매장 확대, AI 활용 수출 통합 정보 제공^(26.12.)

② 보건의료 AX 가속화

※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의료생태계 AX 추진

- (AI 기본의료) AI 기반 예방·진료·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「AI 기본 의료 전략*」 수립·발표^(‘26.7.), AI 기반 환자 의뢰·회송 절차 자동화^(‘26.6.~)
* 취약자보건소 중심 일차의료 AX 혁신, 전국 공공병원 AX 전면화, 소버린 의료 AI 체계 구축 등
- (데이터 활용) 공공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및 유전체·바이오 빅데이터(국가 바이오빅데이터) 개방 확대*, 의료기관별 분산 데이터를 중개하는 포털 구축^(‘27.)
* (공공기관) 국립대병원, 질병청, 건보공단, 심평원 등 13개 공공기관^(‘26.12.)
(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) 내부연구자 대상^(‘26.7.), 국내 연구자 대상^(‘26.11.)
- (의료영상정보 공유) CT·MRI 등 의료영상을 중앙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환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QR(PIN)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공유*^(‘26.下~)
* 영상정보공유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^(‘26.8.~‘27.1.) → 시스템 구축^(‘27.2.~6.)
 - 의료기관에서 촬영이력 실시간 조회^(‘26.12.~), 일정기간(예: 1개월) 내 재촬영 제한
- (법적기반)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 절차 및 환자의 전송 요구권 명확화,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「디지털헬스케어법」 제정^(‘26.下)

③ AI기반 복지·돌봄 혁신

※ AI 혁신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 대응 및 新성장동력 확보

- (로드맵 수립) AI를 활용한 복지·돌봄 현장 업무 혁신, 기술개발·실증·확산 등을 위한 중장기(‘26~‘30) 전략 마련^(‘26.下)
- (서비스 모델)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·돌봄 수요급증에 대응해 ‘AI + 센서 + 돌봄로봇’ 통합환경 구축*을 통한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
* AI와 돌봄 종사자가 협업, 독거노인 가구에 안전·정서지원·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(마이데이터) 복지·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·관리하는 활용체계* 구축^(‘27.)
* (예) 복지·돌봄 통합이력 기반 누락서비스 안내, 돌봄기관 간 정보전송을 통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, 돌봄일지 등 서비스 이용 현황 보호자 공유 등
- (新성장동력) 단기간 내 현장 적용 가능한 AI·IoT 기술부터 미래 돌봄 수요 충족 위한 피지컬 AI 돌봄로봇까지 AI 돌봄기술 쉼 주기* 지원
* 범정부 AI 돌봄기술 R&D, 현장 실증 리빙랩 운영, 新기술 초기시장 확보 지원 등
- (복지행정 AX) 신청·조사·결정 등 급여업무 전 단계에 AI 기술 적용, AI 단순 반복·확인 업무+공무원 상담 등 질적 업무에 집중하는 행정체계 전환*
* 지자체(시군구 11개) 실증을 통한 성능분석 및 단계적 시스템 적용(‘26.12.)

2 개혁 과제

① 연금구조 개혁(90-1·2·3·4)

※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·공정성·수익·안정성 확보로 든든한 노후보장체계 확립

□ (기초연금) 구조개편 저소득층에게 ‘더 많이’ 지원되도록 하후상박 개편
(現 : 일괄 35만원), 現노인의 경제적 수준 반영한 선정기준 개선 추진(現 : 노인中 70%)

○ 불합리 개선 일률적 부부감액(現 : 20%)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·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

※ 구조개편 및 불합리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, 연내 입법 및 '27년 시행 목표 추진

□ (국민연금) 보장성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

○ 공정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 크레딧 혜택 배제*('26.下),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**('26.下~)

* 아동학대 범죄자(아동복지법 제3조), 군 복무 중 물의 일으켜 1년 6월 이상 실형 선고

** (방향) 해외사례 및 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추납 요건 완화, 적용대상 검토

○ 수익·안정성 역대급 성과('25년 수익률 18.82%)에 이어, 기금수익률 지속 제고*

* ESG주식·채권→대체투자로 확대 적용('27.~), 위탁운용사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마련·이행점검('26.下~)

② 청년복지정책 도약(77-1, 87-4, 90-1)

※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 제공

□ (소득보장) 국민연금 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를 위한 첫 보험료 지원*('27.~), 군 복무·출산 시 가입기간 인정 확대** 추진('26.下)

*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 연금보험료(약 4.2만원) 지원

** ▲(군) 12개월 → 군 복무 기간 전체 ▲(출산) 첫째^(12개월)-둘째^(15개월) 가입인정 기간 차등화

○ 脫노동·소득공백·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놓인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 연구·설계('26.下), 비수도권 등 보건·복지 청년일자리 발굴

□ (저소득 청년 자립) 지원 취창업 기초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기간 확대(6→12개월)^(26.下), 자산형성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
○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급여 직접 지급 검토('27.)

* (現)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생계·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에게 가구 전체의 생계급여 지급

□ (위기아동·청년) 가족돌봄 및 고립·은둔 청년 발굴·상담·사례관리 지원 강화*

* 전담 지원체계(現:4개) 전국화('26.下) → 자기돌봄비(200만원) 지원, 가족돌봄연계 등

3 지방주도 성장 과제

1 5극·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(83-3, 84-1·2·3, 85-2)

①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

※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도입

- (국립대병원) 복지부로 소관 이관 완료^(26.8.) 및 인프라·인력·AX 등
 쏠분야 집중 투자^(27.~) → 중증·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

최종치료	▶ 암·외상 등 정부지정센터 집중 지정, 전임교원 확대,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 ▶ 첨단 치료장비 도입, 노후·진료시설 현대화, 중환자실 확충 등 ▶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통해 진료 정밀도 제고, 응급환자 신속대응
R&D	▶ 바이오·AI 등 5극3특 핵심산업과 연계한 특화발전 지원 ▶ 쏠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한 중증·희귀난치 질환 R&D 강화
네트워크	▶ 권역 내 2·3차 병원 의료자원을 통합·조정하여 진료공백 최소화

- (지방공공의료기관)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·수술·중환자를 진료
 하도록, ①핵심진료 인프라 확충 + ②필수의료인력 확보 지원 + ③보상체계 전환^(27.~)

* (現) 행위별 보상구조 → (改) 공공기능 수행기반 기관단위 성과보상 구조로 단계적 전환

-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단기통합형 보건지소* 및 비대면협진 활성화를 통한
 농어촌 보건진료 안정화^(26.6.~), 중장기공공보건의원^(거점) + 보건진료소^(연계)로 개편**

* 보건진료전담공무원(간호사)이 근무하며 기초진료와 의약품을 처방하는 보건지소

** (現) 보건소(246)·보건의료원(16)·보건지소(1,326)·보건진료소(1,894) 다층 개별 운영 →
 (改) 공공보건의원(의료인력 집중화, 외래·이동·방문진료 총괄) + 보건진료소(의료·건강·돌봄 최일선 접점)

- (정주여건)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, 의사인력 확보, 소아·응급·분만 등
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

② 지역·필수의료 기반 구축

※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지역·필수의료 투자·보상·인력 지원체계 확립

- (투자) 시·도 주도 지역완결 체계 구축 年 1.2조원^{특별회계} 집중 투자^(27.)
 →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 기획·집행

* 3대 원칙 : ①일수록취약지일수록 지원 확대, ②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, ③지역 자율성 강화

- (보상) 25년만 수가구조 전면 개편 → 지역·필수의료 年 3.6조원*
 투자 + 검사 과다지출 年 2.6조원 절감^(26.12.~)으로 지출효율화 병행

* 지역 우대수가 원칙 확립(4천억원), 필수의료 기본진료 강화(1.5조원), 중증·응급 최종치료
 (9천억원), 모자·소아의료 환경 조성(3천억원), 급성기·회복기 의료공급체계 확립(5천억원)

- (인력) 단기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^(27.), 중장기지역의사제 도입^(27.)
 +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^(30.) + 지역의대 신설^(30.)

4 국가정상화 과제

▶ 국민 생명·복지 위협 비정상적 관행 근절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

①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 (국정과제 83-1)

※ 암 환자 대상 요양병원 진료비페이백 등 부당·위법행위 근절

- (개요)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 위협 및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및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·가짜진료 근절*

*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('09~'25) : 총 1,805개소, 환수결정 금액 총 2.9조원
요양기관 부당청구액 : ('23) 698억 원 → ('24) 1,318억 원 → ('25) 1,033억 원

- (경과) 행정조사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외 부적절성*도 조사하는 「비정상·가짜진료행정조사반」 가동^(26.6.~), 기획조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^(26.6.~), 특사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관^(특사경) 도입** 추진^(26.~)

* (예) *효과가 없는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, *ADHD 치료제를 비급여로 과잉 처방하는 경우, *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환급(페이백)하는 경우 등

** 법률 개정 즉시 운영되도록 인력 확보·훈련 중(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수사지원 등)

❖ 비정상·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실적

▶ (협업) 국민건강보험공단·건강보험심사평가원·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^(6.18)

▶ (제보센터·포상금)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이메일을 통해 위법행위 정황 상시 접수

* 총 53건(페이백 19, 사무장병원 1, 허위부당청구 17, 비급여패키지 9건 등)^(7.14. 기준)

▶ (행정조사)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 우선 조사 실시*

* 1차 행정조사^(6.23.~26.) 후 6개 병원 수사 의뢰^(7.1.), 2차 행정조사^(7.7.~13.) 후 12개 병원 수사 의뢰^(7.15.)

- (계획) 행정조사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의무^{의료법 제66조} 적극 적용 → 면허정지 및 고발·수사의뢰^(26.6.~), 기획조사 신속 실시 후 실효적 징벌 부과^{(26.8.~)*} 및 시스템 고도화^{(27.~)**}, 특사경 신속한 근거법률 개정 완료^(~26.), 도입^(27.~)

* 부당이득금 환수, 최대 1년 업무정지, 부당금액 5배 과징금 부과, 위반사실 공표 등

** AI 기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

② 산후조리원 선결제·예약금 미반환 방지

※ 이용(예정)자에게 산후조리원 폐·휴업 사전 고지 의무화

- (개요) 산후조리원 선결제 후 폐업으로,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예방

- (경과) 산후조리원 폐·휴업 30일 전 신고 및 이용(예정)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「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^(26.6.~7.)

- (계획) 시행규칙 개정 완료 → 산후조리원 폐·휴업 사전고지 의무화^(26.10.~)

③ 가짜 앰블런스 근절

※ **가짜 앰블런스가 없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이송환경 조성**

- (개요) 사회적 신뢰 저해 및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가짜 앰블런스 근절
- (경과) 민간이송업체 특별점검('25.7.~9.) 및 '25년 정기점검('25.12.~'26.4.) 실시*, 경찰청과 긴급 구급차 기준** 마련('25.7.) 단속***('25.9.~12.)
 - * ▲(특별) 88개 업체·94건 위반사항 적발, ▲(정기) 23개 업체·33건 위반사항 적발
 - ** ▲소생·긴급·응급·준응급 환자 이송, ▲혈액·장기 긴급이송, ▲환자이송 목적 출동 등
 - *** 긴급 용도 외 사이렌·경광등 사용 등 「도로교통법」 위반 구급차 69건 적발(경찰청)
- (계획) GPS 기반 실시간 운행기록 전송체계 구축*('26.10.~),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('26.4분기), 중증환자 전원 수가 지원 시범 추진('27.1분기)
 - * 구급차 운행정보 전산 관리체계 : ▲(민간이송업체·법인) '26.10., ▲(공공·의료기관 등) '27.10.

④ 의약품 접근성 제고

※ **편의점 상비약 품목 및 무약촌 판매장소 확대**

- (개요)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기준 개선
- (경과) 수요 분석·전문가 자문을 통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(안)* 마련, 판매점 기준 개선**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(상임위 계류 중)
 - * (現) 해열진통제·감기약·소화제·파스 4개 효능군 11개 → (改) 법상 최대 20개
 - ** (現)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 → (改) 약국·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(무약촌)은 예외 적용
- (계획) 전문가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거쳐 품목 지정 고시개정('26.12.), 약국·24시간 편의점 없는 무약촌 내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('26.12.)

⑤ 검체검사(혈액검사 등) 위탁·수탁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및 질관리 강화

※ **과잉검사 방지 및 검사질 제고를 위한 검체검사 위탁·수탁 제도 개편 연내 완료**

- (개요) 검체검사 위탁·수탁 시, 병·의원^{위탁}과 검사기관^{수탁}이 보상을 나눠 갖는 구조* → 과잉검사 발생 및 검사기관 간 검사비 할인 경쟁으로 질 저하
 - * 병·의원에 검사기관의 검사료를 일괄 지급 → 병·의원과 검사기관이 검사료를 정산
- (경과) 개편방향 의결('25.12.건강심) → 현장 의견수렴('26.1.~6.) → 위탁·수탁기관 보상 구분지급*(수탁기관 보상, 질제고 조건부 보상 도입) 및 질관리 강화방안 확정('26.6.)
 - * (現) 평균 위탁 60%, 수탁 40% 상호정산 → (改) 1단계 위탁 35%, 수탁 65% 구분지급
- (계획) 위탁·수탁기관 보상 구분지급 시행 및 질 강화 세부기준 마련('26.下)
 - 위탁기관 과보상 축소로 과잉검사 방지, 수탁기관 검사료 구분지급 및 조건부 보상 도입으로 저가 수탁경쟁 차단 및 질 강화

연번	현장의견	현황 및 개선계획(안)
1	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	○(현황) '25.1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기준* 상향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추진 * (~'24.)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 시 수급 제외 → ('25.~) 연소득 1.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시 수급 제외 ○(계획) 중증장애인,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*(국정과제77) * ('27.~)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 ('28.~) 노인 연령대별 순차 폐지 검토
2	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 등록 기준 완화	○(현황) 국민 수요 및 안전성 검토 등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안 마련* 및 농어촌 등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보방안** 마련 * 연구용역('26.4~12월) ** 약사법 개정안 발의('26.1.6.) ○(계획) 품목 확대(고시 개정 사항) 및 무약촌 판매점 24시간 운영기준 완화(법 개정사항) - (품목 확대) 전문가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거쳐 품목 지정 고시 개정('26.12월) - (판매점 기준) 약국·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 내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('26.12월)
3	아동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	○(현황) 기록물(24만여 권) 안전한 보존 위한 서고 환경 개선(항온·항습기 등 추가 설치) 및 임시서고에서 국가기록원으로의 위탁보관* 방안 협의 중 * 복지부-국가기록원-보장원 간 위탁보관 업무협약('25.10.10.) ○(계획) 사전조사를 통해 기록물 상태 확인('26.6~10월), 소독 필요 기록물 선별, 화학 소독 후 이관('26.10~12월) - 국가기록원 이관 이후, 기록물의 추가 손상 방지 등을 위한 스캔 등 전산화*도 추진('27년~) * 기록물의 규모를 고려,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필요
4	실손보험 관련 허위·과장 의료광고	○(현황) 의료기관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여부, 보상 정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음에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료광고 사례 빈번 ○(계획) 『의료법 시행령』 개정(~'26.9월) -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, 범위, 대상, 금액 등에 대해 허위·과장 내용을 게재하여 환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